



지난 5월 '재생에너지 전략'을 마련했고, 태양광·해상풍력 등 원별 세부대책을 통해 적극 투자 중임

<보도 주요내용>

- 10.9.(수), 경향신문은 「국내 RE100 기업 전력사용량 서울 전체의 1.4배… 반도체 지원 늘리면서 재생에너지 대책은 전무」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략부재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였습니다.

<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>

- 우리는 좁은 국토면적, 수력 자원 제한, 전력계통 한계 등으로 인해 주요국 대비 재생에너지 가격이 높고,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임
 - 국내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,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임
 - 국내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처음 가입한 '21년도의 국내 RE100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2%에 불과하였으나, '22년에는 9%로, '23년은 13%(추정)로 크게 상향되고 있음
 - 정부는 지난 5월, 「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」을 마련하여 기업의 RE100 대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적극 지원 중
 - 「산단태양광 대책('24.7)」, 「풍력입찰 로드맵('24.8)」 등 재생에너지 원별 대책도 마련
 - 현재 각 기업들은 중장기 이행전략에 따라, 국내 마련된 다양한 재생에너지 구매수단*을 적절히 활용하여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
- * 녹색프리미엄('21.1), 전력구매계약 제도(직접 PPA, '22.9) 등이 글로벌 RE100 운영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 받음

□ 앞으로도, 정부는 우리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활히 RE100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임

○ 기업들의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, 재생에너지 비용은 효율적으로 낮춰나가는 한편, 재생에너지 사용 편의를 위해 거래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임

○ 아울러, 정부는 전력망 신속확충을 위한 「전력계통 혁신대책*」(’23.12)추진 등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

* 핵심선로 조기·적기 건설, 수용성 강화, 전력망 특별법 제정, 기존선로 활용 극대화 등

□ 정부는 무탄소에너지(CFE)의 균형 있는 활용이라는 기조 아래 원전·신재생 등 다양한 발전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음

담당 부서	재생에너지정책과	책임자	과 장	남명우 (044-203-5360)
		담당자	사무관	조현진 (044-203-5363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